

노동시민사회 '4월 1일 적폐청산의 날' 집회 열겠다

8 변백선 기자 | ⓒ 승인 2017.03.29 17:46

적폐청산 및 개혁입법 외면 야당 규탄, 지속적 공동투쟁 결의



적폐청산을 결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시국선언 대표자들. ⓒ 변백선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사드배치 즉각 중단과 세월호 진상규명 등 적폐청산 개혁입법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단행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4.16연대, 백남기투쟁본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시국선언 참여 대표자들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국민들에게 촛불의 민의가 관철되고, 적폐가 청산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박근혜가 탄핵됐지만 적폐청산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사드와 세월호 문제뿐 아니라 위안부야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등 수많은 적폐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1일 오후 6시 광화문에서 '사드 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 청산의 날'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민주공화국 실현을 위해 △정치적 민주주의의 심화 △재벌개혁과 경제적민주주의 △노동존중사회 △보편복지사회 △인권 존중사회 △안전생태사회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민주시민교육 △시민적 기본권 강화와 새로운 시민사회의 형성 등 국민적 의지를 모아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사드 배치 철회와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을 더불어 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문제에 최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오로지 대통령 만들기 위한, 오로지 권력만을 생각하는 것이 대선후보와 정당들의 행태"이라며 "광장에서 외친 국민들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변백선 기자



사드 저지 및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적폐청산 개혁입법 해결 촉구 시국선언. © 변백선 기자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변백선 기자 n7349794@naver.com